

기독교학교, 정체성 회복이 절실하다



윤남훈 (한국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

윤남훈 이사장은 미국 Lynchburg College Graduate School를 졸업했으며 정의여중·고와 대광중 교사, 정의여고 교감을 거쳐 정의여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삼산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과 서울시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는 현대사회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개인의 적성과 능력,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교육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는 고유한 건학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 감독 아래 통일된 교육을 구현하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고유한 색깔을 지닌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학생들의 능력이나 소질,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

립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만 해도 다채로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국가의 규제로 교육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사학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의 규제와 통제 하에서 자율성과 특수성을 상실한 채 사실상 공립화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를 깊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일제의 강압통치와 군사정권을 거치며 만들어진 국가의 통제 위주 패러다임이 고착화되었고,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며 '평등' 이념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사학의 자유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사립학교의 본연의 모습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사립학교는

더 이상 사립학교가 아닌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기독교학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단적으로 기독교학교라는 깃대기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정체성을 발현하여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태다. 일반적인 사립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을 기본 목표로 하는 기독교 학교는 건학이념에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기독교학교 연구소의 박상진 소장은 기독교적 건학 이념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지, 예배 및 종교 수업이 존재하는지, 교목실이 있고 종교 교사가 근무하는지 등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기독교학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기준으로 지난

2015년에 조사한 결과, 총 1,668개의 사립 초, 중, 고등학교 중 314개가 기독교 학교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혼을 일깨우다.

지난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배재 중,고등학교)와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연세대학교)가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설립한 이래 많은 사립학교들이 세워졌다. 서양 선교사 또는 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독지가들이 나서 잇따라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족혼을 깨우고 서양의 근대 학문과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일에 생애를 바쳤다. 이승훈, 조만식, 서재필, 김규식, 김마리아, 김구 등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우리



나라 교육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민족 지도자들이 이때 등장한다. 교육자이자 사상가로 오산학교 교장을 지낸 유영모 선생을 비롯해 함석헌, 김소월, 나도향, 윤동주, 주시경 등 많은 인물이 이들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되었다. 기독교 학교가 대한민국의 개화 및 독립,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이다.

흔들리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다. 기독교 학교의 현재 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국내 대표적 기독교 사학으로, 고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가 1949년에 설립한 학교법인 대광학원의 대광 고등학교가 겪었던 '강의석 사건'이다. 2005년에 대광고를 졸업한 강의석씨는 재학 시 종교 교육의 강제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0년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영향으로 대광고는 채플 수업을 자율화해야 했고, 다른 기독교 학교들도 종교 교과와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기독교계 학교에 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배정될 경우 특정 종교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법적 시비와 항의, 각종 민원제기로 기독교 학교의 교육 활동은 심리적으로나 운영 전반에 있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서울의 D특성화고등학교는 신입생이 종교 수업을 거부하고 민원을 넣자 특별감사를 해 학생들에게 희망 조사서를 받고 복수 과목을 개설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결국 학교는 1~2명의 학

생을 배려하기 위해 많은 시간적, 물질적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매년 반복하게 되었고 차라리 해당 학생의 의사를 물어 전학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초에 목회자 자녀가 불교 계통 중학교에 배정받자 그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회피 전학제도'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하거나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Y중학교 경우는 이단 종파로 규정된 종교를 가진 학생이 입학해 종교 수업과 종교 행사를 거부하고 민원을 통해 환경 과목 개설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대체 과목을 개설해 주고, 그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도록 통지했다. 교육부의 관련 지침은 '당해 학년의 학급 평균 정원 이상의 학생이 특정 선택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이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과 상관 없이 1명이 요청해도 학기 중에 대체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부담을 지도록 요구한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종교 수업의 위축과 함께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요소가 '교사임용' 문제다. 2005년 말에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명목 삼아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학법이 개정된 후부터 기독교 학교의 교사 임용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독교 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원 임용을 통해 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전수하고, 교과적 지식을 넘어 삶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필수 요소다. 그런데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기독교 학교가 교원을 선발할 때 세례 증명서나 담임 목사 추천서 제출, 특정 종교를 응시 조건으로 해서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의 종교적 신념이 건학 이념과 다를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 논리에 의해 선택권을 빼앗긴 학생과 학교

이 같은 갈등과 비효율적 상황을 만든 출발점은 1969학년도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1974년에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다. 두 제도는 고교 입시 경쟁과 대학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파행을 극복하고자 시도되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으며, 다양한 사립학교 교육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독교 학교도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외국어 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 등이 설립되었지만 현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막겠다며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자 애쓰고 있다. 완벽한 제도란 없기에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것대로 해소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국가의 승인 하에 나름의 목표를 갖고 출발한 학교들을 부정함으로써 '단일성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들이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그 정체성을 지켜가고 고유한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교육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

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평준화 체제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교육 체제 속에서 '자율성'을 빼앗긴 채 '준(準)공립 학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교가 현재 겪고 있는 갈등과 제반 문제는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교육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한 학교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학교 경영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교육 제도에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를 편입시킴으로써 자율성을 무시하고 공립학교와 같은 체제 속에 가두어 버렸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 학교의 존립 근거나 건학 이념 구현 의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전한 기독교적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그 건학 이념을 적극 구현하는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바른 성품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기독교 학교의 고유한 역할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